

철거 vs 지킨다 '서울광장 분향소' 긴장감

서울시 "불법 시설물" vs 유가족 측 "물리나지 않겠다" 경찰·서울시 관계자와 유가족 충돌...실신해 병원 이송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 측과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한 행동을 달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유가족 측은 철거 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서울시 측은 도심 분향소 설치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인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에 의해 설치됐다.

당초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공원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추모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행정 도중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광화문 분향소 설치 요청 불허에 서울광장 기습 설치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내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했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측에 세종로공원에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분향소 설치에 반대하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누

적됐고, 통행하는 시민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도보에 방해되는 구조물을 시민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유가족 측은 세종로공원을 포함해 분향소 장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비해 중로경찰서에 세종로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세종로공원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해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비했다.

◆서울시, 강제철거 예고...유가족 "계고장 보내도 지킬 것"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계고 이후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판례를 보면 계고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미 제한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따르면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장소와 관련해 녹사평역 지하

4층이 아니면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가족 측에 통보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강제철거 예고에 물리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전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죽은 아이들은 여기서 끝까지 지킬 것"이라면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우리도 죽는 목숨으로 같이 나갈 것이다. 계고장이 10장, 100장, 수천장을 보내도 우린 여기서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서울광장에 위패와 영정이 있는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것처럼 (차려달라). 그런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영정과 위패가 있다"고 전했다.

◆갈등 고조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설치 과정서도 병원 이송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던 유가족 측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 및 서울시 관계자가 충돌해 유가족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에는 유가족 측이 분향소에 전기관로를 반입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퇴민씨, 허박가영, 고정

주희양의 어머니들이 뇌진탕 및 실신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전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법정 다름 가능성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만큼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전날 유가족 측은 법정 다툼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공동간사)는 "서울시는 몇 차례 계고하고 철거를 대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없이 퇴거할 수 없다"며 "(분향소 설치)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다는 것은 전례와 판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분향소 설치에 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쟁점은 분향소가 공익적 목적에 벗어나는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분향소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지, 퇴거 명령 없이 시설물만 철거를 감행할 것인지 등인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분향소를 유가족 측이 지키고 있는 한 법원의 퇴거명령 없이 강제 철거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사모 던지는 졸업생들 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일로 '부당 해고' 백양사 농협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불복, 농협 측 부당 행정심판 청구

장성근 백양사 농협 직원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놓고 해고 직원과 법적 공방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양사 농협 버섯사업소에 2017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김 소장이 재직 시 사업장에 대해 불명확한 경영으로 농협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농협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2021년 8월에 대기발령을 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농협중앙회부터 감사받아 감봉 6개월과 5년여만 손해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농협에서 김 소장에 대해 사법

기관에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로 종결 처리 됐다.

하지만 이에 김 씨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유포한 두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백양사 농협이 전 버섯사업소 김 소장에 대해 지난해 2022년 5월 3일에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김 씨는 부당 해고라고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해 두차례 모두 노동 위원회에 서는 부당 해고라며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백양사 농협측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판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영길 조합장은 전 버섯사업소 김 소장은 농협에 손실을 주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농협 자체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해고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하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부당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양사농협은 노무사비용 4백만원, 이행강제금 7백만원 지불했으며,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3천만원 대해 농협에서 지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기자

지난해 현장서 소방 공무원 411명 다쳐

지난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 4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해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서 발생한 사고는 389건으로 2021년 440건에 비해 51건 줄었다. 2021년 467명이었던 인명 피해도 지난해 411명으로 56명(12%) 줄었다.

다만,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고, 중상자도 135명에서 182명으로 47명 증가했다.

사망자 3명은 지난해 1월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창고 화재에서 목숨을 잃은 구조대원들이다. 소방청은 이후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했다.

먼저 지난해 1~5월 민·관합동 중앙조사단을 꾸려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사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인 등을 밝혔다. 이를 소방 표준 작전절차 등의 지침에 반영해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 안전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시도소방본부별로 자체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장마·태풍·폭염·겨울철 등과 같은 특정 시기를 '사고 위험요인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를 제작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했다. 향후 전국 시도본부에 배포,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재환기자



광주 동부소방, 2월 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강제차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담양소방, '신속 공사장서 화재' 응급 불티 주의 당부

담양소방서는 지난 2일 담양군 봉산면 상가 신속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 25명, 장비 8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화 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그린 모빌리티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강진소방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수소방, '불나면 대피 먼저' 집중 홍보 나서

여수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불나면 대피 먼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광영119안전센터, 대규모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점밀방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는 최근 대규모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점밀방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2023년 '119생활안전순찰대' 확대 운영

완도소방서는 2023년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생활밀착 소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